

5G 주파수 경매 어떻게 이뤄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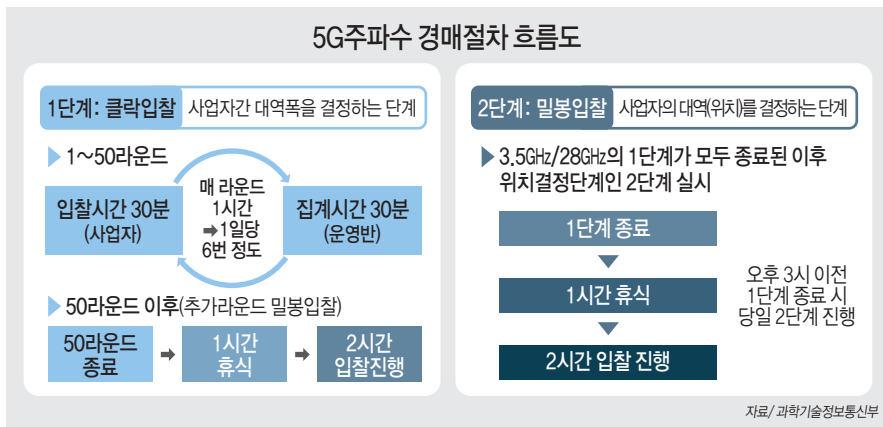
블록 단위 할당 → 입찰가격 제시 → 수급 일치때 종료

도달거리 긴 '3.5GHz 대역' 인기
3.5GHz 대역 시작가 2조6544억
매물규모 등 '역대최대' 전망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다가온 가운데 이번 경매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는 15일 오전 9시에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된다. 이번 주파수경매는 매물 규모와 시작가 모두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경매의 특징은 '블록 단위 경매'와 '금액 제시'에 있다. 블록 단위 경매 방식은 비교적 균등한 할당을 통해 자금력이 많은 특정 통신사만 모든 것을 차지하는 쏠림현상을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 대상은 우선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280MHz(메가헤르츠)폭이 있으며 28GHz 대역에서 2400MHz폭이 준비되었다. 3.5GHz 대역은 10MHz씩 28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3.5GHz 대역 2조 6544억원, 28GHz 6216억원으로 총 3조 2760억원이다.

이통3사가 탐내는 것은 3.5GHz 대역이다. 28GHz에 비해 장파장인 주파수 특성상 도달 거리가 길다. 따라서 보다 적은 중계기로 전국망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GHz 대역에서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대역폭(총량제한)은 100MHz다. 이통3사 모두 초반에 100MHz폭을 기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는 우선 통신사별로 블록 개수를 통해 주파수 대역폭을 결정하는 1단계를 거친다. 3.5GHz에서 28개로 쪼개진 블록을 놓고 3개 이통사가 경쟁한다. 28GHz에서는 24개로 쪼개진 블록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정부는 매 라운드 블록당 입찰가격을 제시하며, 사업자는 블록개수 단위로 입찰을 하게 된다.

만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입찰가를 높여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며 수요가 공급과 일치하면 1단계를 종료한다. 50라운드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금액상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우 전파정책과장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주파수 경매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없는 추가라운드를 1회 밀봉형식으로 진행한다. 경쟁사 가격과 자사 낙찰가격이 함께 상승하기에 타사를 견제하기 위해 호가만 올려놓는 빠지는 전략을 쓰기 어렵다.

1라운드 시작가격은 3.5GHz가 1블록당 948억원이고 28GHz가 1블록당 259억원이다. 가격 증분은 매 라운드 시작가격의

1%이내이며 제시가격은 직전 라운드 가격에 증분을 포함해 결정된다. 1단계 2라운드부터는 금액선택입찰이 적용된다. 해당 라운드의 시작가격을 초과하고 정부의 제시가격 미만인 금액을 선택해 희망 블록 수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금액선택입찰을 하면 정부의 제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경우는 "금액 선택 입찰이 없으면 입찰이 무한히 루프를 돌 우려가 있기에 나온 것"이라며 "제시가격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제시하게 되어 수요가 떨어졌을 때 경매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단계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사업자의 대역(위치)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통사는 상·중·하단 대역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입찰할 수 있으며 가능한 조합은 회사당 3개 씩이다.

이 중 최고가 조합이 낙찰되는데 위치별로 장단점이 있기에 업계에서는 특정 위치를 두고 과열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정부, 쌀 10만톤 사들여 '밥상물가' 잡는다

농식품부,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물가안정 일환 '수매비축제' 도입 검토

정부가 최근 들쭉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오르고 있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10만톤을 정부가 구매하고 감자 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14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4.1%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달 상승에는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가장 가격이 크게 들쭉인 품목은 채소류로, 노지채소보다는 시설채소의 진폭이 컸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하순 애호박과 오이 등 시설채소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일조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이 평년 대

비 35.2%나 뛰는 등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채소는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 생육이 빠르게 회복되는 특성이 있어 이달 상승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쌀은 산지 가격 80kg 기준으로 4월 17만1376원에서 지난달 17만2264원을 거쳐 이달 17만4096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수확기까지 정부양곡 10만톤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 쌀 구매는 15일 공고 후 26일 입찰을 벌여 다음달 9일 넘길 예정이다.

또한 올봄 가격이 크게 오른 감자는 지난달 말 노지 봄 감자가 출하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 20kg 기준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에는 5만940원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4만1498원으로 집계돼 평년보다 46%나 비싸게 팔려나 있다. 그러나 이달 상승에는 평년보다 5% 비싼 수준인

2만5062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이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양파는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남 병해 발생 지역에서 2만톤을 추가 수매하고, 수출과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채소류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이 불안하면 신속한 수입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난다"며 "생산 전부터 생육과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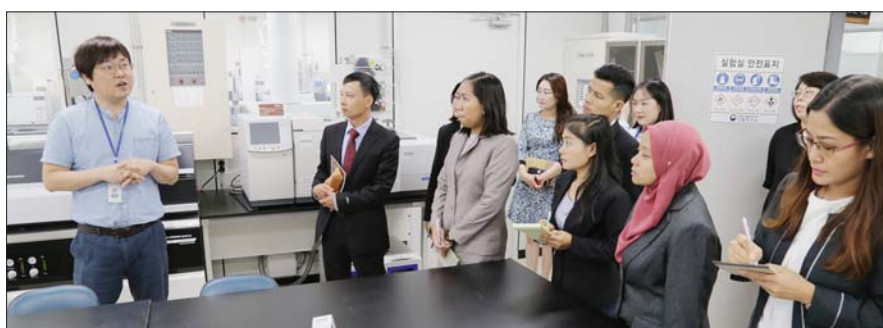
韓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세계에 알린다

농관원, 亞 7개국 관련 공무원 초청
산류농약·중금속 관리 등 기술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사업(ODA)의 일환으로 이달 11일부터 4주에 걸쳐 아시아 지역 7개국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7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아시아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국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병원성미생물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분석기술을 전수한다.

아시아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며 그동안 12개국 127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농관원의 초청연수사업은 연수국가의 장기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단



농관원이 아세안 7개국 안전관리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역량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농관원

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수 1단계(2011~2016년)에서 정책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난해부터는 연수 2단계로 전환

해 유해물질 분석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연수로 개선해 진행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기술과 함께 안전관리 전문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청년고용의무제 3년 연장 추진

공공기관의 일정 비율 이상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1년까지 연장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종료하는 한시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은 404곳으로, 이 가운데 323곳(80.0%)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2011년 3.0%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자동차부품기업에 81억 지원

정부가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내에 250억원의 예산을 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하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위해 8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신설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부품기업 R

&D 지원사업'과 한국GM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위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와 세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에 약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청년노동자에 교통비 매월 5만원 지급

산업부, 대상 산업단지 842곳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15~34세)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공고를 통해 842개의 산업단지 명단을 공개했으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이달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